

탄 원 서

존경하는 검사님께

지난 4월 28일 주식회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불법매매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을 배경으로 나타난 홈플러스의 대응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마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이 여론에 편승하여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기소한 것이라며 도리어 공격하였습니다. 그 날 우리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권리 신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표로 오랜 기간 힘써 왔습니다. 이제 2014년 벌어진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맞서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기업이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사고 팔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사건이 시작된 처음부터 줄곧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정부 부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2015년 2월 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사과는 커녕 보험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과감히 증거를 인멸하였고, 고객을 위하여 신선식품의 가격을 내린다는 발표를 통하여 이마저도 마케팅 수법으로 이용하였으며, “어찌됐든 고객이 동의한 것이니 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 라는 등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232여억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 3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하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고작 수 억 원입니다. 홈플러스는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기업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형사재판을 통하여 엄정한 법의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명예를 건 유죄의 구형이, 높은 형량의 구형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실행 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에게 홈플러스 개인정보불법매매 사건을 의뢰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